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5.6.2.(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행정	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최승록	(02-3145-8129)
	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	책임자	단 장	박진무	(054-810-1090)
		담당자	팀 장	이지영	(02-6923-9131)

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.

-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결과 ... “피해자 원금까지 전액 구제”
-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

〈 주요 내용 〉

-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'23.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 -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.29.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.
-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,
 - 추심과정의 불법행위(성착취 추심)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.
- 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,
 -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,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➢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,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'1332(→3번)', '불법사금융 지킴이'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,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 추진 경과

- 수백 ~ 수천%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면서도 악랄한 추심 행위*를 통해 채무자 및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행위를 뿌리뽑고, 피해자들이 받은 재산적·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,
 - * 지인 추심행위, 나체사진을 이용한 성착취 추심행위 등
-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'23.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소송 판결이 5.29.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.

II 판결 내용

- **(사실관계)** 피해자는 총 15회에 걸쳐 51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(연이율 1,738% ~ 4,171%)하는 과정에서,
 - 불법사금융업자들(총 6명)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한편,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.
- **(청구내용)**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'24.5.29.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총 1,090만원(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890만원, 불법행위(나체사진 유포·협박 등)에 대한 손해청구 200만원)을 청구*하였습니다.
 - * 소송진행 중 2명과 합의(합의금 350만원)하여 기존 불법행위 손해청구 금액(550만원)을 합의금만큼 200만원으로 감액
- **(판결내용)**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①**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(890만원)** 및 ②**불법행위**에 대한 **손해배상청구(200만원)**를 **전부 인용**하였습니다.

- ⇒ 피해자의 아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(민소법 §150)에 의한 판결 선고
- ① **기지급 원리금 반환 청구(890만원)** : 불법대부계약 무효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(현저한 고금리 대출행위)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
 - ② **불법행위(나체사진 유포·협박 등)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(200만원)**

Ⅲ 금번 판결의 의미

◆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체를 반환하도록 하여
①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, ②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- (실질적인 피해구제 강화)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판례는 없었으나,
 - 이제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.
 - 다만, 이번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므로, 향후 동종 소송에서 가해자가 다툼 경우에도 이번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(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 차단)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및 악질적인 추심행위(지인·성착취 추심 등)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,
 -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(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피해 예방)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,
 -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구제를 모색하도록 독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▶ 이번 판결을 통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확대(원리금 전액 반환)가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.

▶ 이와 더불어 7.22.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*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, 불법대부계약 근절 및 피해자구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①(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) 원금 및 이자 무효, ②(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) 이자 무효

IV 향후 계획

-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연중 적극 지원하여,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-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, 불법사금융 피해신고·상담,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신청·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불법사금융 피해신고·상담 및 무료 채무자대리인·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신청방법

- ① (전화)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☎1332→3번)
또는 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☎132→0번)
- ② (인터넷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민원·신고 → “[불법사금융지킴이](#)”
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“[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](#)”
- ③ (모바일) 스마트폰 카메라로 오른쪽 QR코드를 인식
→ [무료 채무자대리인·소송변호사 지원 제도신청](#) 사이트로 바로 연결

QR코드



- 또한, '25.7.22.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*'이 명시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으로,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이 제한되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* 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(성착취추심, 인신매매, 폭행·협박 등) → 원금 및 이자 상환의무 없음
② 불사금융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→ 이자 상환의무 없음

-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명확히 확립되고 국민들이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,
-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,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1. 피해 사실 확인

**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
확인하세요!**

- ✓ 이자를 원금의 연 20%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, 가족·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.

* 1일 0.0547%, 1개월 1.66%, 1분기 5.0%

2. 위반사실 고지

**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
중단을 요청하세요!**

- ✓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.
- ✓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, 단호히 거절하세요.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.

3. 증거 확보

**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!
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!**

- ✓ 계약서,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·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'증거'입니다

4. 피해 신고

**피해 사실을
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!**

- ✓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(☎1332→3번)·경찰(☎112)에 신고하세요.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.

*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·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

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, 대응요령

채무 당사자는 물론,
관계인도
무료 법률서비스를
받을 수 있습니다!



5. 구제 요청

**무료 법률서비스 등
도움을 요청하세요!**

- ✓ 불법사금융(고금리 대출, 불법추심 등)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'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'를 신청하세요.
* 금감원(☎1332→3번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
- ✓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(금감원), 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소송(법률구조공단)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✓ 온라인 등에 유포(우려)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(☎02-735-8994)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.

붙임 2

채무자대리인 ·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제도 신청

- (전화 신청)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→3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
- (온라인 신청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로 접속 후 ‘민원·신고’ → ‘불법사금융 지킴이’ → ‘불법사금융 피해구제’ → ‘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’

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신청 화면

민원·신고

분쟁조정정보

인허가 / 등록 · 신고

불공정 금융거래 신고센터

불법사금융 지킴이

- 불법사금융 지킴이
- 불법사금융이란
- 소액·금전을 찾고 있나요? (불법사금융 피해예방)
-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? (불법사금융 피해구제)
 - 신고·상담 안내
 -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
 -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
- 불법사금융 정보모음

보이스피싱지킴이

불법금융신고센터
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

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!

법정최고이자율(연20%) 초과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'채무자대리인' 및 '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'를 신청하세요!

바로가기

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.

-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
-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
-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
- 야간(저녁9시~아침8시)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
- 가족·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
- 가족·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- 협박·공포심·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
-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
-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
-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진으로 안내하는 경우

[참고]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

☀ **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추심 피해(우려)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②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,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**

※ 지원대상 : 불법사금융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(우려)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

다만,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·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%(1인 가구 기준 月 278.6만원)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